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지역·후보 신경전 격화

강기정, 순천 의대 발표에 전남 서부권 반발 커져 신정훈vs김영록·민형배vs강기정...공방전도 치열 오늘까지 당원투표...본경선 진출자 5명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지역과 후보 간 경쟁이 동시에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선 초반부터 주도권을 둘러싼 공세가 거세지며 경선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경선은 6명에서 5명으로 압축되는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이어 최종 2명이

맞붙는 결선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다자 구도 속에서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경쟁보다 갈등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다. 강기정 후보가 순천에 국립의대 설립 구상을 제시하며 동부권 공략에 나서자, 목

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원이 의원 등 서부권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강 후보의 서부권 공약 발표 현장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시민 간 충돌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영록 후보는 강 후보의 순천 의대 발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강 후보는 “동부권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소외돼 왔다”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지지 기반 확대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과 함께 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후보 간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신정훈 후보 측은 김영록 후보를 향해 “무능하다”며 직격했고, 김 후보 측은 “사실 애국”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제임 기간 인구·경제 지표를 문제 삼고, 500조 반도체 투자 공약과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철현 후보 역시 동부권 소외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영록 후보는 민형배 후보의 과거 통합 신증론을 겨냥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격하며 전력공사 설립과 저가 전기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RE100 산업단지 기

반의 검증된 전력 모델”이라며 “전력공사는 플랫폼 역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후보와 민형배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강 후보는 민 후보의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 비리 문제를 거론했고, 민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맞받으며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자 구도 특성상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의 공방이 향후 단일화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세가 누적될수록 지지층 간 감정선의 골이 깊어져 결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배심원 토론회 등 검증 절차가 예정돼 있지만, 경쟁이 과열될 경우 정책 배심원 토론회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특별시라는 중대한 선거임에도 정책 경쟁보다 갈등이 앞서는 흐름”이라며 “경선 과정의 분열이 커질수록 본선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20일까지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 5명을 확정할 뒤, 4월 3일부터 5일까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37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개최식.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9일 여수 소노컴에서 열린 '제37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개최식'에서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속

12만t·98억 투입...인상분 80% 지원, 영농철 안정 대응

전남도가 국제정세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을 이어가며 농가 경영비 안정에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선 할인 방식으로 지원해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의 80%를 선 할인으로 판매하고, 이후 정부·지자체·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농가 비용 절감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올해 전남 지역 지원 물량은 12만3500t 규모로, 총사업비는 98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29억6000만원, 도비 49억원, 시군비 15억8000만원, 농협 29억6000만원, 농가 자부담 19억8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농가별 지원은 최근 2년간 비료 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t당 8만원 수

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요소 비료는 20kg 기준 1만7900원에서 1만6250원으로, 21 복합비료는 1만9350원에서 1만7800원으로 낮아진 가격에 공급된다. 현장에서는 지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강진 칠량면에서 시설농가를 하는 농가 최영필 씨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비료 가격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보조가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 사태 등 외부 변수로 농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열린다. 2022년 도입 이후 농가 비용 절감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올해 전남 지역 지원 물량은 12만3500t 규모로, 총사업비는 98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29억6000만원, 도비 49억원, 시군비 15억8000만원, 농협 29억6000만원, 농가 자부담 19억8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농가별 지원은 최근 2년간 비료 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t당 8만원 수

▶1면 '6·3지선 분석'서 계속

광역의원의 경우 50세 이상 예비후보자는 광주와 전남 모두 75.0% (광주 52명 중 39명, 전남 88명 중 66명)나 됐다. 예비후보자 4명 중 3명 꼴이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광주가 75.9% (108명 중 80명), 전남은 73.7% (156명 중 115명)였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예비후보가 359명 (78.4%)에 달해 이 지역이 여전히 여당의 텃밭임을 입증했다. 이어 △진보당 40명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6, 기초의원 30명) △조국혁신당 32명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5, 기초의원 25명) △정의당 3명 (기초의원 3명) △개혁신당 1명 (기초의원) △기본소득당 1명 (광역의원) △국민권선당 1명 (광역의원) 이었고, 무소속도 18명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4, 기초의원 11)이나 됐다.

무안 오리농장 시 향원 검출 10km 예찰·24시간 이동중지

전남 무안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향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무안군 현경면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향원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6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향원 검출은 사육 단계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전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기금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소화전과 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소독 지원을 집중 투입해 전방위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광주 시민이 선호 도시철도 2호선 역명은 월드컵경기장역·조선대역·광주역 등 인기

은·오프라인 의견조사 1만3779명 참여...시, 6월 최종 고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을 정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요 정거장의 역명이 유목표를 드러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20개 역 가운데 18개 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에 1만3779명(온라인 1만1293명, 오프라인 2486명)이 참여했다.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214정거장(남광주역) 등 2개는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설문결과, 서구 유덕동 인근인 238정거장은 ‘유덕역’이 가장 많은 수표를 보였다. 서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 (201정거장)은 시청역, 한국은행역, 시청사거리역이 제시됐으며 이중 ‘시청역’이 꼽혔다. 상무지구 일대에 위치한 202정거장은 행정동 명칭인 ‘치평역’이, 204정거장은 인근 저수지와 근린공원을 반영한 ‘운천저수지역’이 가장 많은 수표를 받았다. 금호동 일대인 205정거장은 ‘금호역’, 금호동 풍금사거리 일대 (206정거장)은 ‘풍금사거리역’이 선호됐다. 인접한 207정거장과 208정거장은 각각 ‘월드컵경기장역’, ‘풍암호수공원역’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광대학교 사거리인 209정거장은 ‘풍암생활체육공원역’이, 무등시장 일대 (210정거장)는 ‘무등시장역’이 꼽혔다. 남구청 인근인 211정거장은 남구청역과 백운광장역,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

는 공중 보행로 명칭을 반영한 푸른길브릿지역이 후보로 선정됐으나 ‘백운광장역’이 가장 높은 수표를 보였고, 212정거장은 봉선역, 봉선시장역보다 ‘광주기독병원역’이 더 많은 수표를 받았다. 방림동 일대인 213정거장은 방림역이, 조선대입구 교차로 (215정거장)는 동구청역, 서석역을 제치고 ‘조선대역’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지산사거리 일대 (216정거장)는 ‘광주주병원·검찰청역’, 두암지구입구 삼거리 (217정거장)는 ‘두암사거리역’, 계림동 서방사거리 (218정거장)는 ‘광주교대역’, 광주역 인근 (219정거장)은 ‘광주역’이 1순위로 꼽혔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 역명은 6월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도, 자원안보 주의 격상...상황관리반 가동 4개 도시가스사 대표와 간담회...요금 인상 최소화 협조 요청

전남도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원유)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엔호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에너지 위기대응 상황 관리반’을 구성해 비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상황관리반을 중심으로 석유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주유소 최고가격제에 맞춰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격 상승 폭이 큰 주유소 등 89개소를 방문 점검했으며, 가격 인하 독려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군 석유류 특별 신고센터’에 접수된 매점매석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난 18일에는 강원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역 4개 도시가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강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도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 최소화, 에너지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등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의무적 에너지절약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 추가적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웨딩시장 ‘깜깜이 계약’ 더 이상 방치 안돼”

권항엽, 표시광고법 개정안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울·사천)은 신혼부부의 웨딩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웨딩업 시장에서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을 중심으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계약해제 시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소비자 피해 민원은 총 101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8.3%를 차지해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예식장 업체만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업체의 도입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상품의 내용에 대해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민법에 따라 예식, 여행 등의 정례이행계약이 착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소비자계약법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항엽 의원은 “웨딩 시장에서 ‘명색 한 번’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깜깜이 계약’으로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짓과 기만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solee235@gwangnam.co.kr